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7

July 2013 | vol.4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지방자치실천포럼 중계

–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기조연설 요약
– 포럼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슈대담: 김만수 부천시장

이달의 Issue

– 지방재정의 투명성, 비전과 과제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주요국의 재정투명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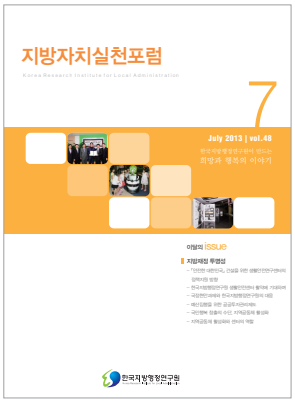
지방재정 투명성

4 ● 지방자치실천포럼
- 「지방자치실천포럼」 창립총회 개최
-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기조연설 요약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1 ● 특별대담 : 김문수 경기도지사

18 ● 이슈대담 : 김만수 부천시장

23 ● 논단
- 지방재정의 투명성, 비전과 과제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7 July 2013 **Vol. 4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48호
발행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편집인 / 지방자치실천포럼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해외우수사례** 31
– 주요국의 재정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탐방** 35
–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시, 판타스틱 부천

● **연구원 동정** 38

「지방자치실천포럼」 창립총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포럼은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지방자치관련 학계, 언론,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50인 내외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창립총회의 초청인사로 대통령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위원 : 학계 박광국 교수 외 9명, 안전행정부 정재근 실장 외 7명, 지방자치단체 염태영 시장 외 10명, 언론 및 시민단체 신현태 연합뉴스 전무 외 7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명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기조연설 요약〉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희망의 새 시대' 이다. 희망과 새 시대라는 단어들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국정 비전이나 슬로건으로서 희망과 새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 정부까지, 국정철학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내 위상, 무역 규모, 올림픽 순위 등의 국가 지표에서는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혼율이나 가계부채율과 같은 개인의 지표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이라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고용없는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탈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고, '국가의 성장 = 개인의 성장' 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새 시대란 기존의 등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국가 성장이 개인 성장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 이것이 국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국가의 성장이 개인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철학이 국정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정철학이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인 것도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을 위한 국정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세종시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와 작은 것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작은 것들에 두어야 한다. 즉 커다란 전체와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풍 피해의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거대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발전보다는 주민 체감형의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해 인수위원회가 주장한 4대 국정 기조를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것은 맞춤형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비판 받는 국민 소통을 위해, 횟수가 아닌 진정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어야 하며, 국민이 잘못 아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사전적 정의도 찾을 필요 없을 정도의 쉬운 말로 자신의 기조와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이것이 바로 '국민 중심의 새 시대' 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공급자(외형, 형식)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국민눈높이, 실질) 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말한 '새 시대' 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중심의 국정운영은 맞춤형 복지를 그 중심개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겉포장뿐인 정책보다는 내용이 있는 정책만을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개인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국민 행복 제안 센터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민원처리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이다. 이것은 단순히 민원 처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원이력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1인의 민원해결이 100만 명의 민원해결을 가져온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탈북자들에게 적용시켜, 이후에 통일이 되었을 때 이를 북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들의 정착이 쉽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적응과 통합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작은 것'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닌 더욱 큰 것과 연결된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 1인이 단순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복이 커지면 많은 사람의 행복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가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무게가 나라 발전의 토대가 되고, 개개인의 행복이 모여 국력의 무게가 되며,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상생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가 주장하는 '새 시대' 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희망'은 자신이 노력하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희망'이란 다름 아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단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브롬(Vroom)의 기대이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꼴찌가 한 번에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실현 가능한 중간 목표를 통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에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즉,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 스펙이 아닌 적성과 실제 능력을 중시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볼 때, 중산층은 빈곤층과 부유층을 잇는 중간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자유롭게 수직 이동을 하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러한 사다리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희망의 사다리'를 잇기 위해 정부는 고용율 70%와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학력과 소득율은 비례하고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표를 통해 학습욕구를 자극하지만, 한국은 그 표를 통해 "공부를 못하면 잘 살 수 없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표출한다고 한다. 이는 중간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말하는 '희망' 이란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같은 정책은 기존에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해보면,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즉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어 적당히 무릎까지 나올 정도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그 정도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경제민주화 정책도 '희망의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흘린 땀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상적 성장을 위해 지원체계 또한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욕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통합으로 지급하던 것을 개별 지급으로 바꾸어, 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복지와 성장 사이에 고용을 넣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엄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을 유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다시 복지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박근혜 새 정부에서 주장하는 '희망의 새 시대' 를 요약해보면, 국민행복을 국정운영의 최고 목표로 삼아 개개인의 성취가 국가의 발전 동력이 되고, 국가 발전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게 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럼위원 토론 요약〉

소진광 가천대 부총장: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말하는 국민 보다 '주민' 이라는 어구는 어떤가 생각해봤는데 주민은 배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아 마땅치는 않고, 시민권(citizenship)을 포함하는 '시민' 중심은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시민 역량의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지역사회와 국가가 성장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염태영 논산시장: 희망과 새 시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쉬웠다. 박 정부가 차후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과제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면 중앙과 지방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앙은 획일적 기준으로 지방을 다룬다. 이러한 원천적 제약은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라고 말씀하셨다."와 같은 말은 이미 가능과 불가능이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어법을 통해 소통이나 타개책 논의 등의 기회가 상실된다. 앞으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자치의 재정과 관련하여 언론의 왜곡과 매도가 조금 심한 것 같다. 언론에서는 지방 재정은 방만하고 선심 쓰듯 낭비를 하며 과대청사를 짓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처럼 몰아간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 또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원인이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채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너무 왜곡하여 보는 시각이 만연한 것 같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를 통해 보았을 때, 지방자치는 느리지만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나 공무원들의 권한 증가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공동체 확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다음달 포럼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신현태 연합뉴스전무: 지방선거가 1995년 부활된 것을 기점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성년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통하는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나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전시성 선심행정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지역주민간 갈등 증폭 등 부작용도 컸던 게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학계에서 느끼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려움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해보자는 담론의 장이다. 마침 기조강연을 해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규정 하나를 고치면 국민 1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소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우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를 국가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중앙정부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지자체의 발전기회를 우선시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국민과 지자체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창립된 지방자치실천포럼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언론도 이 부분에서 국민과 지자체, 정부를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비전과 미션 및 목표가 매우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이라 평가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가 이익증진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행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옮겨감에 따라 국민중심/협업중심/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음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 와의 연계고리를 확실히 가질 때 실천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발전포럼” 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정리 한부영 (대외협력관)

“사람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일구어나가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 **일시 및 장소** / 2013.7.24(수) 10시 경기도지사 지사실
- **인터뷰 대상**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원장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7월 1일자로 민선5기 3년을 맞으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요 성과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수 지사 : 저는 689대 경기도 최장수 관찰사[1]로서 임기 내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라는 도정 철학을 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일자리창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 복지, 365민원실 운영, 하수도보급율 향상(66.5%→88.2%)을 통한 팔당호 수질 개선 (BODmg/l 1.4→ 1.1), 경기북부SOC 확충, 삼성 고덕산업단지 유치 등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1시군 1소방서 개설로 사회안전망 확충, 규제완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돌봄 복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08년부터 2013년 4월까지 5년간 81,214가구에 886억원을 지원해왔으며 이 성과로 5년 연속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 김문수 지사는 언론 등에서 조선시대부터 헤아렸을 때 689대 경기도 관찰사라고 언급해왔다.

또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365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민원실은 1년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종일 여권발급, 생활민원현장처리,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을 운영하여 어려운 도민을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사업이 시작한 이래 51만5천건을 처리하여 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서울과 협의하여 2007년부터 실시하여 도민들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투자가 중요한데,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유치는 100조원 이상 투자로 최소 3만명 이상 고용창출, 파급고용 127만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함께 청렴도 향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영생, 부패 즉사"라는 구호 하에 도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권익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우수기관' 이상, 반부패 경쟁력 평가(권익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우수기관' 이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우수시책 청렴 선도기관(권익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국민신문고 대상 부패방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최근 들어 경제부문에서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실업, 중소기업 육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경기도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은 무엇이었고 향후 추진전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문수 지사 :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며, 특히 '9988'(경기도의 기업 수 99%, 근로자수 88%가 중소기업)[2] 이라는 표현처럼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경기도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자금, 기술, 마케팅, 애로 분야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고용 창출과 기업 지원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째, 경기도의 지역경쟁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온 것입니다. 경기도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첨단 산업이 위치해 있으며, 전문 인력이 많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 등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공장 총량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규제 개선 성과로 347개 기업 18조 9천억원 투자, 4만 5천개 일자리 창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0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3,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조성하여 5,000개 업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전기·가스·통신업, 농산물·수산물 가공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1조 3,200억원을 마련하여 3만6천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 무담보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판로개척을 지원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닥터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국내·외 G-FAIR), 텍사스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3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20억 원, 4,157여개 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뷰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3년에 동북아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 경기도 기업 수는 총 306만 9천개이며 그 중 99%인 306만 6천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경기도 총근로자 1,339만명의 88%인 1,175만명이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넷째, 기업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07년 "기업 SOS시스템" 을 구축, 2013년 6월까지 45,399개 업체의 73,818건 기업애로를 처리해 왔습니다. "경기도 기업SOS" 지원제도는 Speed One-stop Solution의 약어로서 기업애로를 빠르게 한 번에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불합리한 공장 입지제한 규제개선 등 공로로 2012년 '기업 섬김이 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2013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4.17) 및 국가브랜드 대상(4.3) 수상 등의 실적을 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연봉차이,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전국의 실업자 중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은 52.7%에 불과하고 나머지 47.3%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5월 현재 경기도 전체 실업자 21만2천명 가운데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은 8만9천명(42.1%)인데 비해 구직자의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12만3천명(5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마찰적 미스매치가 27.6%, 구조적 미스매치가 30.3%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별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잡매칭(job matching),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등 현장중심 · 찾아가는 일자리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잡매칭" 사업은 구인 등록 후 1개월 동안 미채용된 일자리가 있는 10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을 시작하여 경기도 곳곳에서 취업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들을 찾아가 취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하여 모두 299회에 걸쳐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청년뉴딜사업" 을 추진하여 청년층 특성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이제는 지역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전달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현장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좋다고 생각되는 행정개혁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 : 취임 후 찾아가는 행정, 돌보는 행정, 깨끗한 행정, 책임지는 행정이라는 도정철학을 가지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로든 찾아가는 행정으로 도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도정 전반에 현장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답'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도민의 애로사항을 찾아가 해결해 드리는 도민안방,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민원전철, 24시간 열려있는 365민원실로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소방서가 없던 시군에 빠짐없이 소방서를 세우고, 무한돌봄으로 위기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만족도도 높고 보람 또한 컸던 사업들입니다.

특히, 저출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나눔터, 24시간어린이집, 꿈나무안심학교, 무한돌봄사업 등은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확대되었으며,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고위공무원의 청렴도 평가, 부서 간 청렴경쟁시스템, 청렴해피콜 등으로 권익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수도권 규제문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중요 이슈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과의 협력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수 지사 : 수도권 규제를 타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상생, 보완이 아닌 제로섬 관계로 생각하여 비수도권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장점을 없애고 끌어내리기보다 각 지방이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살린 경쟁력을 갖춘 정책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투자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2010년 9월)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전국에

78,000개 일자리 창출, 8조7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비수도권에 일자리(16.7%) 11,200개, 생산유발효과(21.3%) 1조 5,300억 등의 효과도 나타나 수도권의 발전으로 비수도권도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뉴욕 · 런던 · 동경 · 파리 · 북경 등 선진국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하여 현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약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로섬게임 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양분 논리를 뛰어넘는 지역 상생모델로서 상호 협력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경기도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 : 1984년 개원 이래 지방자치의 도입과 지방차치 발전에 훌륭한 길잡이역할을 해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지방자치실천포럼」을 발족시켜 지방자치 관련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연구원이 참 뜻 깊은 작업을 시작하였다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 새정부와 함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모색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과감하고도 전략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현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와서 현재 안전행정부, 외교부, 환경부, 노동부(일자리사업) 등에서 주요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교류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규정에 지방경력 의무화를 고려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 조항을 법률이나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자율 속의 창조", "분권 속의 창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행정의 개혁과 지방분권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자치 시대, 투명한 정부운영의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3.7.17(수) 14시 부천시청 시장실
- **인터뷰 대상** / 김만수 부천시장
- **인터뷰 진행** / 이 효 연구위원



김만수
부천시장

이효 연구위원 :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수 시장 : 부천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정부회계에 포함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도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었고, 중앙정부에서

도 복식부기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재무보고서가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리면 크게 일반적인 효과와 부천시의 실질적인 도입 성과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확산 도입하는 계기 마련

② 회계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여 중앙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방정부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③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책임성 향상

④ 기존에는 회계장부를 수기로 기록 및 결산하였으나 자산, 부채, 비용, 수익 등이 관리되는 재정정보를 구축

다음으로 부천시의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① 단편적인 정보에서 구체적인 종합 재정정보를 제공 : 우리시의 총자산과 부채를 총괄적,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의 재정 운영현황 및 분석 가능

② 도로개설, 재해방지시설 등에 투자한 자본적 투자 금액과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

③ 장기계속사업이나 건설 중인 공사, 시의 소유 자산 등을 즉시 파악가능하며 세부내역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④ 채권 · 채무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성이 제고됨

⑤ 각종 자료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며 체계적으로 결산자료가 간단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여줌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됨

종합적으로 재정정보가 잘 관리되어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원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요약〉

- 종합재정상태 파악이 전보다 향상되었음
  - 단편적인 채무 총금액에 관한 정보에서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재정의 운영현황 및 분석이 가능
- 자산과 부채의 관리 능력 향상
  - 사업별 직접비 및 간접비(시설부대비, 일반운영비)등 총 투자금액이 파악 가능하여 활용에 용이함
- 재정위기에 대한 조기 대처기능 강화
- 재정 투명성 향상
  - 복식부기 자기검증 기능에 의해 회계처리의 오류가 해소되고 명확한 예산관리로 인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

이효 연구위원 : 최근 정부3.0 전략에서 보듯이 회계 투명성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회계투명성, 세정투명성, 재정공시, 성과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부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수 시장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의 시대로 시책에 대한 참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 등 투명하고 유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3.0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운영을 위해 4개 분야 23개 업무, 213개 항목에 대하여 재정정보에 관한 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시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17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37개를 정기, 수시 공표 대상으로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년(2011, 2012년)간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하고, 설명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자 부천시 홈페이지에 〈e-재정고〉 창구를 신설하여 사업예산제도, 재정공시, 재정정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 창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효 연구위원 :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예산 투명성 지수(Open Budget Index)를 통해 투명성 정도를 측정합니다. 특히, 각 국가들은 투명한 정부 구현에 대해서 예산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의 이용가능성,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주요 감시 · 감독기구(의회, 주민)의 역할 등을 중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수 시장 : 부천시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 투명성 지수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정책토론회를 거쳐 시민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투자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부천시가 신 ·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심균형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시책사업과 예산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수렴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동은 직접적인 주민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예산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활발한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본청은 시민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의견을 수렴, 토론 및 의견을 제출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참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시민 주권 인식이 강화되었고 주민의 참여 역량 향상, 예산결정 과정의 주민의사 반영 비중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그 성과와 효과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재무회계에 관리회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원가를 산출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현금흐름 예측모형 개발 등 선진화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효 연구위원 : 부천시는 영화제, 만화축제, 박물관 등 문화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시 정부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역점을 두시는 주요 방향과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만수 시장 :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매이션 페스티벌 등 전국 제일의 문화도시로 매년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대통령기관표창인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의 불모지에서 십 수년 전에 뿌렸던 문화의 씨앗이 값진 열매로 활짝피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한 문화특별시 부천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의 뜻 깊은 개통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원시)~부천(소사)~고양(대곡)지하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17년에는 온전한 격자형 지하철 시대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또한 가장 핵심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신·구 도시 균형발전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으로 구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도서관 시설 구축 등 행정의 중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원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천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만족도 제고에 힘을 기울일 것이고, 주차장 확충,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정비, 광고물 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 경로당 활성화 등 실천 가능한 10대 역점 정비사업을 선정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일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효 연구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의원 연찬활동, 지방자치단체평가, 조직진단 및 재정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바라는 점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만수 시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과 더불어 행정과 재정에 관한 자문, 창의적인 조사와 연구로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끈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도시계획에서부터 행정의 내부혁신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개혁과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좀 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 지방재정 건전화 등 재정 운영에 있어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관으로 노력을 더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정리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재정의 투명성, 비전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1. 재정투명성을 위한 세계적 노력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이념은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MF는 1998년 재정 투명성 평가를 위한 매뉴얼(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을 개발하였고, 2007년에 개편을 하였다가 최근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투명성의 수준과 범위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2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투명성이 높은 나라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하는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재정 투명성이 재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중의 하나인 IBP(International Budgetary Partnership)는 매년 세계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 투명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IMF와는 구분되는 지표를 개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8년에 66점, 2010년에 71점 그리고 2012년에 75점을 기록하면서 참여 대상국 중 8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예산공개지수(OBI: Open Budget Index)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 참여 부분에서는 92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국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002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연을 맺고 매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1)]

이러한 운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산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쟁점이 발생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운영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이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를 정착사키는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IBP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다면, 또 다른 흐름은 참여 예산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를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위해 2006년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 이념의 하나로 제시했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으로 도입하였다. 물론 참여의 방식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voting)를 한다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발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5월에 시카고에 있었던 세계 주민참여 예산제 행사에서 한국의 위원회 방식과 중앙정부에 의한 참여 확대는 특이한 모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2)]

2. 투명성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

이러한 국내외적인 제도의 확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공개와 참여의 효과가 주민에게 체감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예컨대 최근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보면 상호 불신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투명성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이 취득세 감세, 복지비 분담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한다고 불평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면서 중앙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면 분식회계, 횡령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예산 낭비와 부패의 사례를 보면서 주민은 재원의 부족함보다는 세출의 낭비에 더욱 화가 나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재정에 대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회복하는 첫 출발은 지방재원의 확보 이전에 세출의 구조

1) 2006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점수를 DB화하여 하버드 대학에서는 국가별 사례를 모아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시민운동이 축적되고 이것이 연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저. Open Budget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3

2) 필자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조정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방만하게 하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비교적 재정 규모가 큰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정 위기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세출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변화된 환경을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제 성장기에 가지고 있던 세출의 행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정위기론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재정에 흑자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운영의 비대칭이 문제이다. 2007년 금융위기를 이후에 급격하게 지방채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경기가 좋을 때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경제가 어려울 때 이를 지출하려는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자치를 통해 선거가 반복되면서 당선된 장이 임기 동안에 일을 벌이기만 하지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재정 운영의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지방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재정립해야 하는 전환기이며, 이를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갖는 의미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재정 공개의 실효성 수준

예산감시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재정 공개와 참여의 양적인 수준은 높으나, 이를 통한 주민의 만족도와 실질적인 투명성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재정 공개의 항목과 숫자는 많아지고 관련되는 제도도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재정의 총체적인 투명성 제고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년 지방재정분석에서 활용되는 지표는 연도별 DB를 구축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중요한 1차 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관련 7개 지표, 재정 효율성 관련 지표 10개, 재정 계획성 관련 지표 5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회계만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작 재정 위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등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의 경전철 문제로 지역 재정의 파산을 걱정할 수준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재정 관리의 어떠한 지표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상하수도 적자와 적정 요금에 대한 정보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도시 공사를 통해 벌려놓은 개발 사업의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근거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 재정상태 관련 9개 지표와 재정운영 관련 9개 지표, 회계책임 관련 11개의 지표가

발표되고 있지만 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별 자치단체별로는 작성되고 발표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비교를 통한 재정 관리 평가로도 공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서 재정 공시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 내용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세련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주민이 궁금해 하고 지방 재정 운영의 위기를 초래할 정보는 피해하고 있는 것이다. 밤거리에서 돈을 잃어버렸으면 힘들지만 잃어버린 장소 주변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가로등이 켜져 있는 장소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과 같다.

4. 정부 3.0의 시대와 재정 투명성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3.0을 주창하고 있다. 정부가 지시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정부 1.0의 시대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정부 2.0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개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자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의 투명성을 행정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개와 참여의 장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e-호조나 발달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다. 재정 투명성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전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되는 방향성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읽어내고 이를 통해 비전과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IMF의 투명성 평가 모형에 재정 투명성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소개하고 있다. 재정과 관련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시에,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the comprehensiveness, clarity, reliability, timeliness, and relevance of published information abou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tates of public finances). 우리의 행정 능력으로 보면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는 수단은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실천적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재점검하는 것은 지방 재정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이 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재정 투명성의 개념

재정 투명성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점검하고 향상시켜주는 핵심 인프라인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재정 투명성은 정부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활동에 관한 중요한 재정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예산과정에 국(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국(주)민의사를 재정정책에 반영하는 투명성 원리가 중시되고 있다. 최근 정부3.0의 전략(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에서도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보의 개방과 공개가 강조되고 있다.

재정(예산) 투명성과 관련하여 IMF와 OECD는 그 개념과 실천지침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MF는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은 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OECD는 예산은 정책목표가 조정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문서이며, 예산 투명성(budget transparency)이란 모든 관련 재정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완전 공시하는 것을 강조한다. 재정 투명성에 대한 원리나 근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데, 대체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재정 투명성을 갖는 국가들이 보다 엄격한 재정규율과 보다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으로는 재정 투명성이 단순히 일시적이고 수사적이거나 명목상의 투명성과 실제적인 투명성 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2. 재정(예산) 투명성의 핵심요소

이론적인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재정 투명성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요소(측면)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예산과정 또는 순환주기 측면이다. 이는 주로 예산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과 공개성, 법령에 기초한 예산 일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다. 예산수립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에 의하고 있는가?, 예산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는가? 등과 관련된다.

둘째, 예산정보의 공개와 전달 측면이다. 이는 투명한 정부(open-government) 관점에서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재정 투명성을 위한 공시기준으로 ①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또는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② 예산 공개가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③ 정부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출과 차입 현황을 공표하고 있는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예산문서의 내용 측면이다. 이는 예산문서가 적기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개되더라도 예산에 포함된 정보가 재정상황의 명확한 상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산문서에는 세부적인 세입r · 세출의 유형, 예산의 포괄범위,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 예산목표, 재정예측, 성과측정,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나 지출, 구조적 수지의 측정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정보의 신뢰성, 통제 및 책임성 측면이다. 이는 재정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회계기준 기술서 및 실무지침 공시, 회계감사 등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및 독립적인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이다. 재정(예산) 투명성에 대한 또 하나의 측면으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성, 세수예측오차, 민감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3. 지방재정의 투명성 점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재정 투명성은 재정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행정의 구현과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은 새로운 재정정보 반영,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정보의 질적 특성 및 신뢰성, 예산 투명성 평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재정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 중요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표 1〉 참조). 그러나 지방재정 관련 새로운 정보 반영, 공개범위, 재정데이터의 구체성이나 재정통계로서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분 류		세 부 항 목
공통공시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및 재정운영 중요사항 총괄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세입 · 세출 결산,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 현재액,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통합재정수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재정운영 중요사항	재정분석 결과, 감사원 등 감사결과, 주민 주요 관심항목(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기본경비, 출연금/출자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연말지출비율, 지방세 지출예산, 맞춤형 복지비,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보증채무, 중기지방재정계획
특수공시	5건 이상 재정공시 (예: 지역숙원사업,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실적 등)	
통합공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자체수입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출연 · 출자금비율(9개 항목)	

주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 통합공시는 자치단체별 공시결과를 종합하여 재정포털사이트에 통합 공개하는 것임

둘째,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전달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민의 정보 이용가능성(public availability)이 제한적이다. 이는 재정정보가 실질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재정데이터를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현행 재정공시제도는 공시내용이나 공시방법 등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감사기관에서 공시내용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조사 ·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가 불비하다. 실제로 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정부 간 재정관계, 예산과정, 회계처리 및 결산 등에 대해 내 · 외부의 감사기능 및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나 회계감사, 의회 예산심사, 주민감시 등이 미약한 수준이다.

넷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예산)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4.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재정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개, 정보의 공유와 활용, 참여, 책임성 확보의 원리에 의한다고 볼 때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이를 기초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와 정보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원가정보, 통합채무정보, 계약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 정보내용 측면에서도 예산의 낭비나 재정운영에의 영향, 예산우선순위,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유사재정활동, 우발채무, 예산외 활동이 해당된다. 이들 활동은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재정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함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로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전 예산과정을 통해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비롯하여 예산안의 작성과정에서 사전예산보고서나 주민공청회, 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민과 의회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정보의 신뢰성과 통제 및 책임성 확보가 요구된다. 주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가에 대해 감시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는 감시·감독기구와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외부 감사나 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재정정보에의 접근성과 주민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정보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예산서나 재정자료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면 이는 정보에의 접근성과 이해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상태(수준)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최근 재정 투명성 향상 운동이 추진되면서 국제예산파트너쉽(IBP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에서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를 개발하여 5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산투명성지수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투명성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는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재정투명성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재정투명성의 개념과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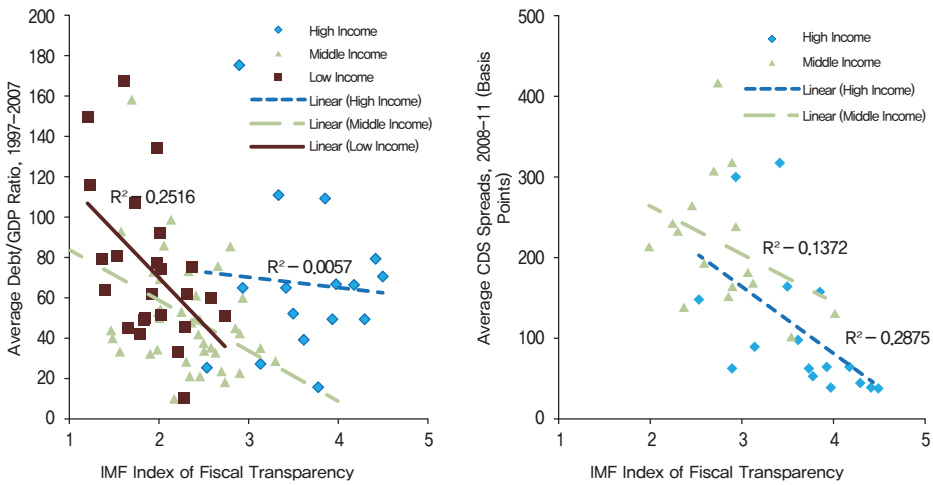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재정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정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가급적 월별이나 분기별로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한다.

재정투명성의 중요성은 199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고 간 외환위기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IMF는 재정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재정투명성 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 규약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 규약은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둘째 재정활동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셋째 예산편성이나 집행, 보고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재정정보는 독립적으로 보증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OECD는 충분성과 적시성, 편의성을 강조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2. 재정투명성과 재정건전성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재정책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외환위기와 같은 재정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잡을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선제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의 왼쪽 그림은 재정투명성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뚜렷한 편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국가는 재정투명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투명성과 재정위험의 관계는 매우 분명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투명성이 높을수록 재정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재정투명성과 재정위기 관계



이처럼 재정투명성은 외환 위기에서 출발하였듯이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투명성의 역할 범위가 재정건전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앞에서 설명한대로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세출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재정정책의 최종목적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제기구들은 정보 접근성과 공개된 정보의 충분성이 재정투명성을 좌우하는 양대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접근성은 이용가능성과 이해 가능성, 정보공개의 충분성에서는 예산정보는 물론이고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의 부채나 경영수지의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있다.

3. 주요국의 사례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국가 운영을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역사적 연원도 우리보다 오래되었다.

〈표 1〉 주요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국 명	법 률 명	시행년도
핀란드	정부활동의 공개성에 관한 법률	1951
미국	정보자유법, 전자정보자유법 등	1967
덴마크	행정문서접근에 관한 법률	1971
프랑스	행정문서접근에 관한 법률	1980
네덜란드	행정공개법	1980
호주	정보자유법	1982
캐나다	정보접근법	1983
한국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7
태국	공적정보법	1997
영국	2000년정보자유법	2000
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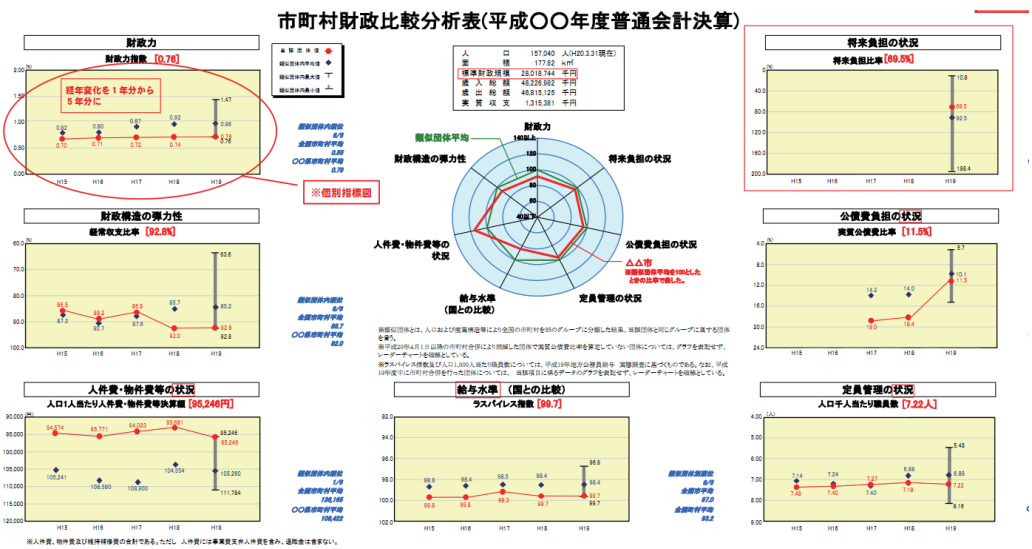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전국 1,847 자치단체 중 1,842개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제정율이 99.7%에 달한다. 일본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개의무정보와 임의제공정보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는 조례로 공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공표제도]와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제도]를 구분하여 활용한다. 둘째, 정보제공방법의 선택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의 정보제공과 함께 정보제공 창구에 의한 정보제공을 시행한다. 셋째,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정보제공에 있어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없으나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상세하고 친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상황조사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도부현별, 시정촌별 재정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① 지방재정백서, ② 일반회계결산 개요, ③ 재정상황자료집, ④ 재정비교분석표, ⑤ 세출비교분석표, ⑥ 건전화판단비율 및 자금부족카드, ⑦ 도도부현 결산상황표, ⑧ 시정촌별 결산상황표, ⑨ 결산카드, ⑩ 재정지수표, ⑪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 일람, ⑫ 지방재정통계연보, ⑬ 공공시설상황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재정상황 중 중요한 [재정지수표]의 세부내용은 재정운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처리된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시정촌에 대한 재정비교분석표이며 재정력, 경상수지비율, 인건비 및 물건비, 지방채무 장래부담, 공채비부담, 정원관리, 급여수준 등 재정건전성과 세출효율성을 대표하는 재정지표를 시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가능하여 자기 지역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2〉 일본의 재정비교분석표 사례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시, 판타스틱 부천

무한한 비밀과 상상이 가득한 축제_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확실한 도시의 색을 가지고 있는 부천, 부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The Puc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일 것이다. 1997년에 시작된 영화제는 국내에서는 장르영화제로서는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EFFFF : European Fan-tasy Film Festivals Federation)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상상력, 대중성, 미래 지향성을 중심으로 주류 상업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비주류 영화제를 지양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사랑, 환상, 모험' 이라는 주제로 올해 17회를 맞이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개막작, 폐막작 및 영화제 기간 내내 상영되는 영화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의 영화들이 많지만, 평소 비주류 장르를 접하기 어려웠던 관람객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함께 일상의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써 좋은 역할을 한다.







비주류 영화제로 시작하여 이제는 어느덧 한국 영화계에서 묵직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대중을 사로잡는 흡입력이 대단하다. 그 힘은 비단 영화 상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상의 탈출, 스트레스의 분출,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인데 이는 영화 상영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낸다.

생각의 전환은 곧 일상의 전환으로 다가오는데 그 예로 우중영화 산책이 있다. 역발상이 이뤄낸 폭우 속 캠핑으로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우중영화 산책은 그 열기가 대단하다. 언제나 귀찮고 찝찝하기만 했던 비가 도심의 지친 일상을 씻어주는 윤활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벗어나 열흘간 쉼 없이 달리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날개를 새롭게 달아주기 위해 끊임없이 상상하고 있다.

꿈을 만들어주는 과거로의 추억여행_한국만화박물관





어른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심의 색을 도화지에 표현한 만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가 많이 바뀌고 발전되어 왔다. 그 시간의 흐름과 발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만화박물관이 부천에 자리 잡고 있다.

부천한국만화박물관에는 1층에는 애니메이션 상영관과 기획 전시공간이 있다. 2층에는 열람공간, 교육실, 전문자료실 등이 있으며 3~4층에는 체험 전시 공간, 기획 전시 공간, 4D 애니메이션 상영관 등이 있다. 과거 시각적 즐거움에 그쳤던 만화에서 벗어나 촉각, 후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다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방문객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아이보다 어른들의 표정이 한껏 상기되어 있기도 하다.

어느새 우리는 키가 훌쩍 커버린 어른이 되었지만 만화를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근심도 걱정도 잊은 채 몰두하게 된다. 무협지의 주인공이 되어 무림을 평정하고 순정만화의 소녀가 되어 왕자님과 달콤한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무미건조한 현실에서 만화박물관은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 같은 존재이다.

미래 산업의 집약_부천로보파크

부천 로보파크는 부천시 산하의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며 한국 최초의 로봇 상설 전시장이다. 부천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 미래 산업인 지능형 로봇 산업을 육성, 홍보하고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5년 12월 개관하였다.





1층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안내 로봇이 전시관을 안내하고, 32석을 갖춘 4D 영상관에서는 3차원 입체 영상을 상영한다. 4가지 테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2층은 로봇의 정의와 탄생 역사를 볼 수 있는 로봇 뮤지엄, 역동적인 로봇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로봇 스포츠 센터, 로보파크체험실과 로보파크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외에도 로봇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로봇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인줄만 알았던 로봇은 어느새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도와주고 있다.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도와주고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척척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다.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될 로봇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부천로보파크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MOU 체결 및 7차 연구회 개최



일 시 / 2013. 6. 24(월) 14: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주 제 / 신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정책 전망
발 표 / KRILA :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GRIPS : 기무라 슌스케, 히토츠바시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MOU 체결



일 시 / 2013. 6. 26(수)
장 소 / 영남대학교
참 석 / 양·기관장 및 주요간부
장 소 / 인적자원 공동활용, 학술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실질 지방자치 정책 개발

「지방자치실천포럼」 창립총회 개최



일 시 / 2013. 6. 26(수) 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조강연 /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새로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실천포럼'이 2013년 6월 26일(수)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논의,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학-민-관-연의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등의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포럼 구성은 지방자치 관련 분야별로 전체 50인 내외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었다.

「제6차 연구방법론 강좌」 개최

일 시 / 2013. 7. 3(수) 10:45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초청강사 / 박완규 교수(중앙대학교)
주 제 /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



「제7차 연구방법론 강좌」 개최

일 시 / 2013. 7. 17(수) 10:45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초청강사 / 김성태 교수(청주대학교)
주 제 / AHP 기법에 대하여



KRILA 자치포럼 개최

일 시 / 2013. 7. 24(수) 10:45~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초청강사 /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
주 제 /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7월 24일 수요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제2차 KRILA 자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방자치실천포럼」 개최

일 시 / 2013. 7. 31(수) 7: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제2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7. 3 ~ 7. 5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9. 4 ~ 9. 6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7월호 발간**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활성화 방안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연구위원



- **「행정지식나눔 효자손」 제1호, 제2호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수원 공동발간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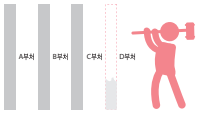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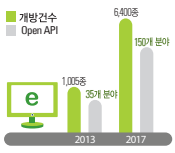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I. 정부3.0이란?

개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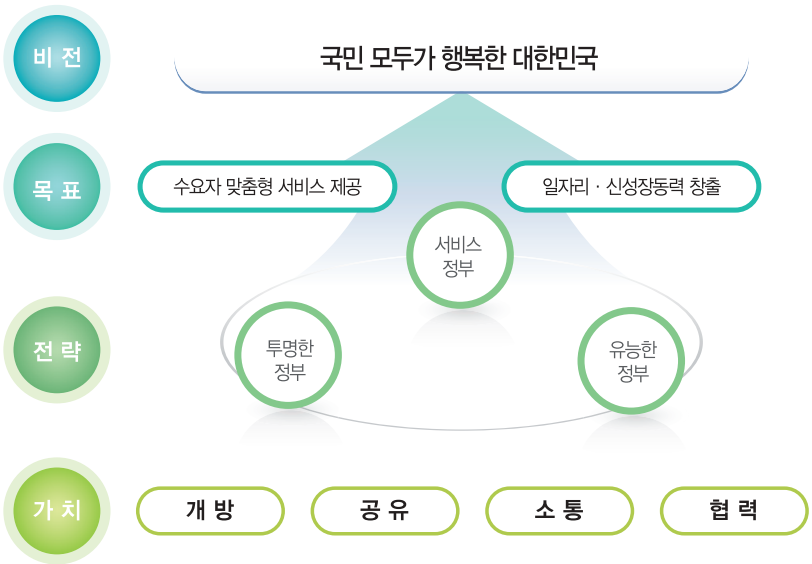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 참여	능동적 공개 · 참여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II. 정부3.0 비전과 추진과제

비전과 전략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